

제8장
1930
~
1940
년대
항일투쟁의
아름다운



1930~1940년대 항일독립운동

1.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1) 朝鮮産業經濟調査會, 『朝鮮産業經濟調査會諮問答中書』(1936), p.1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일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파쇼화되면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육군을 중심으로 세계분할전쟁에 참가할 것을 대비하여 자급자족을 위한 블록 경제체제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의 파쇼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식민지 지배정책 역시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파시즘으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에 이르러 군국주의적 파시즘 체제를 강화하고 대륙침략정책을 강행하였다. 1931년 7월 조선에서의 병력증강을 포함한 군제개혁안을 발표하고 관동군의 배치를 변경하여 전쟁준비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9월 선전포고도 없이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켰다. 나아가 1937년 9월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전쟁수행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내세워 한민족을 전시동원체제에 총동원시키고 민족말살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공병진정책이라는 이름아래 한반도를 그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¹⁾

일제는 대륙침략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인지방과 부산·평양 등지에 대규모의 군수공장을 건설하였다. 본국으로부터 군수물자의 조달이 어려워질 상황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 그리고 함경도 청진과 흥남에는 제철소와 제강소를 건설하고 흥남과 남포에는 경금속 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순천의 화학공장을 비롯하여 석유 정제·유지(油脂) 및 화약제조 공장을 만들어 대륙침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군수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40년대 한국 광공업의 생산액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군수산업 성장배경에는 한국 민중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민족의 반발을 우려하여 징용제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모집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였다. 즉 <국민직업능력 신고령>을 비롯한 노무관계 법령을 계속 공포하고 1940년에는 <조선직업소개령>을 공포하였다. 1941년 일제는 <국민근무보국협력령>을 시행하여 노동력 동원을 강력히 시행하고 1942년에는 대규모의 국민동원계획을 세워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을 강제 동원하였다. 그리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연행 방법으로 징용제를 시행하였다. 당시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끌려간 사람은 616만여 명, 동원된 학생은 192만 명이었다고 한다.²⁾

이때 강제연행된 노무자들은 대다수가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각지의 탄광과 수력발전소, 그리고 철도 등의 공사장과 군수공장 등에서 가혹한 조건 밑에서 중노동으로 혹사를 당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사할린과 남양군도 등의 군수공장으로도 강제동원되었는데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한국인 노무자 수는 1939~1945년 사이에 대략 113~146만 명에 이르렀다. 이중 군요원이 20~30만 명, 군인 23만 명, 위안부 14만 명 등이었다.³⁾

특히 일제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에는 초등학교생까지 군사시설 공사에 강제동원하였으며 <여자정신대 근로령>이라는 법령을 만들어 한국의 12~40세의 미혼 여성들 수십만 명을 군수공장이나 전선으로 강제연행하여 갔다. 여자정신대에 강제연행된 여성 가운데 일부는 남양군도의 군부대 지구에 보내져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위안부 노릇을 하는 등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였다.

또 일제는 1938년 <육군특별지원명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지원병의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강제모병이나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친일파와 친일단체들을 동원하여 지원병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40년 이후에는 지원병을 대대적으로 증모하기 위하여 선전대를 조직하고 지원병 후원회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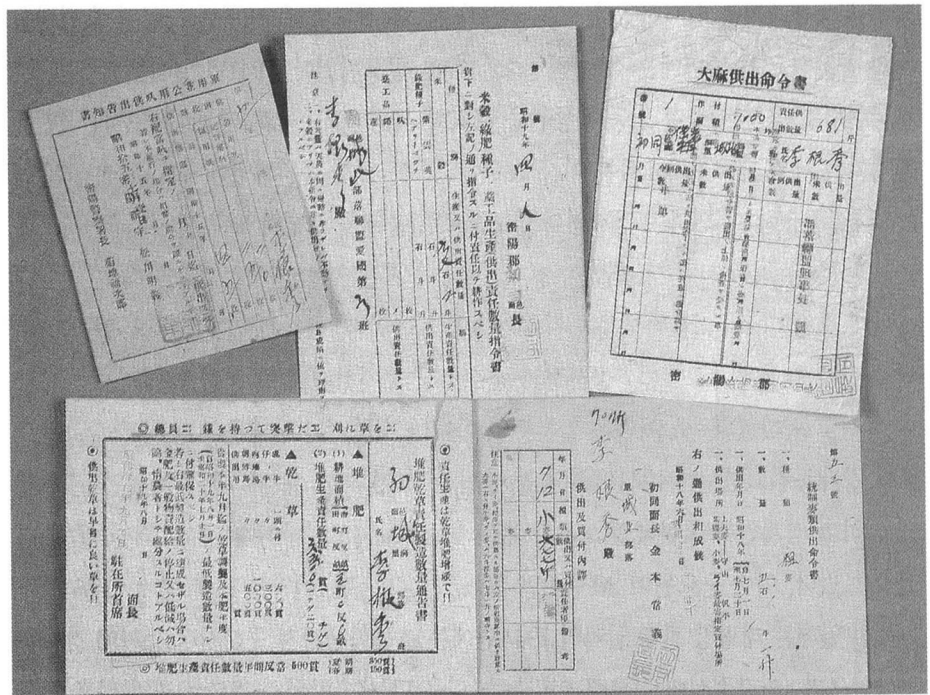
2) 강동진, 『일본군대사』(1985), p.426.

3) 강경구, 『전시하 일제의 농촌 노동력 수탈정책,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청아출판사, 1998), p.88.

4) 朝鮮總督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8), pp.447~457.

국 경찰을 동원하여 지원병 수를 할당하는 등 강제모병을 본격적으로 노골화하였다.⁴⁾

동시에 일제는 1943년에 <해군특별지원명령>을 공포하여 육군의 경우와 같이 강제모병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1944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민족의 청년들을 그들의 대륙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여기에 일제는 학병제를 실시하여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과 졸업생들을 그들의 전쟁터로 동원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의 수단으로 일제가 동원한 인원수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후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육·해군 21만여 명과 군속을 합하여 약 38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이중에서 15만 명이 전쟁에서 대부분 사망하였다.



1940년대 각종 공출명령서

한편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각종의 공출제도(供出制度)를 실시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한국의 민중들을 가혹하게 약탈하였다. 미국의 과도한 공출로 인하여 1939년 미국의 배급제가 실시되었으며 1943년에는 식량영단(食糧營團)을 설립하여 강제수탈체제를 완비하였다. 일제는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출이라는 명목 하에 농촌지역을 구석구석 수색하고 저항하는 농민들을 폭행하면서까지 곡물을 색출하여 갔다.

일제는 한민족을 전시체제에 총동원시킴과 동시에 황민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민

죽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먼저 일본어의 상용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1935년 조선신사를 조선신궁으로 개칭하고 1937년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1면(面) 1신사(神社)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황국신민서사는 학교를 비롯하여 각 관공서·은행·회사·공장 등 모든 직장에서 조례시간이나 회합 때 반드시 제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는 아동용과 중학교 학생 이상의 성인용으로 나뉘어져서 제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아동용 황국신민서사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忍苦) 단련(鍛鍊)하여 훌륭한 국민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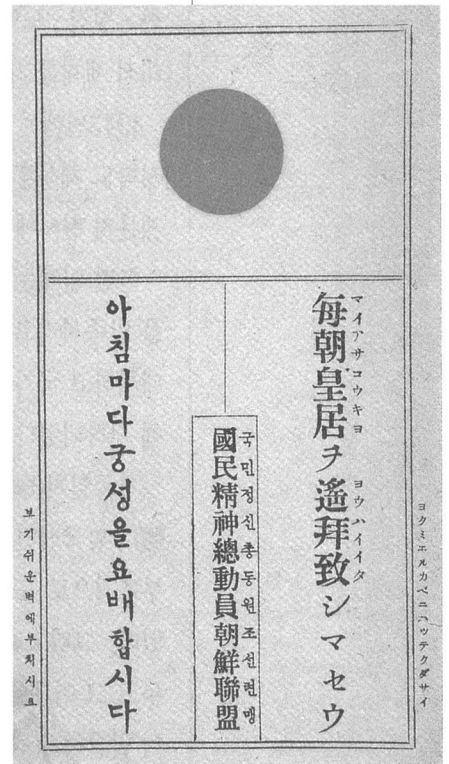
성인용 황국신민서사

1. 우리들은 황국(皇國) 신민(臣民)이다. 충성으로써 군국(軍國)에 보답하자.
2. 우리들 황국 신민은 서로 신애(信愛)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3. 우리들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皇都)를 선양하자.

또 일제는 1938년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강령을 내걸고 제3차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의 주된 내용은 황국신민화 교육으로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우리 역사의 교육을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 이리하여 일제는 학교 명칭과 교육 내용을 일본인 학교와 똑같이 편성하고 한국인의 한국어 상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고 창씨개명에 관한 조문(條文)을 공포한 후 1940년 2월에 시행하였다. 한국 가족제도의 근간이었던 부계

5)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 (1940), p.790.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궁성요배 강요 전단

혈족을 나타내는 성(姓)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일본식 가계(家系)를 중심으로 한 씨제(氏制)를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황민화와 내선일체의 지표라고 강변하였다. 그리하여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학업제한·징집·노역 등의 압력을 가하는 한편 취직차별·비국민 취급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 제제를 가하였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다시 개정하여 전쟁수행을 뒷받침하는 교육·전시학도 체육훈련·학도근로동원 등을 도입하고 수업연한 등을 단축하여 학생들을 언제든지 전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제는 1938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발족시키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일제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처하고 국가총력전에 대비하여 국민운동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선전의 필요 때문에 시작되었다.

거국일치(舉國一致)·진충보국(盡忠報國)·견인지구(堅忍持久)·내선일체(內鮮一體)·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하부조직으로 도(道)·부군도(府郡島)·읍면(邑面)·정동리(町洞里) 등의 지방연맹을 두었다. 그리고 관공서·학교·회사·은행·금융조합·공장·상점 등의 각종 연맹을 두고 그 아래에 애국반을 두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 부문의 여러 운동을 통합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재편되었다.

2. 파쇼통치에 의한 전시수탈체제의 강화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미곡가격이 폭락하여 지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일본의 지주들은 손해본 이윤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작농인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지주의 수탈에 직면한 일본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지주와의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먼저 대풍작으로 인하여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자 한국 쌀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한국 쌀의 일본 수출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을 일본의 식량기지로 만들려고 실시하였던 산미증식계획도 1934년에 접어들어 중단되었다.

이처럼 일제가 일본의 모순을 한국으로 전가시킴에 따라서 소작농인 한국의 농민들

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에 일본인과 한인 지주들은 쌀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율의 소작료를 받거나 고리대 등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농민들은 쌀의 가격 폭락으로 생산지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주들에게 그들의 토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이전의 생활보다 더욱 더 피폐하여졌고 그 결과 농민층 내부의 계층분화도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영세 자소작농·순소작농·농업노동자·화전민으로 형성된 빈농계층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었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였다. 이것은 당시 농촌의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당시 일제의 화전민 정리사업에도 불구하고 화전민 수가 증가한 이유는 농촌에서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지만 해마다 봄을 넘기지 못하고 양식이 바닥났다.

1928년 가뭄의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봄에 양식이 떨어진 농가의 비율은 21.8%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30년에는 유례없는 대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에 양식이 떨어진 농가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1933년에는 43.8%가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 농민의 약 절반이 봄에 굶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제가 파쇼통치하에서 한국인들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했는가를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농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에 일제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 1931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원일성(宇垣一成; 우가키 가즈시게)은 1932년 '자력갱생'과 '진흥대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⁶⁾ 우원 총독은 "조선농민들의 가난은 근본적으로 농민이 게으르고 낭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농민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농업경영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하였다.⁷⁾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1932년에는 <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自作農地創設維持事業)>과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整令)>을 발표하고 1934년에는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을 발표하였다. 일제가 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을 전개한 이유는 농업에서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인 소작관계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제는 소작관계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이 자

6)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1935), p.668, 『朝鮮』1932년 11월호, p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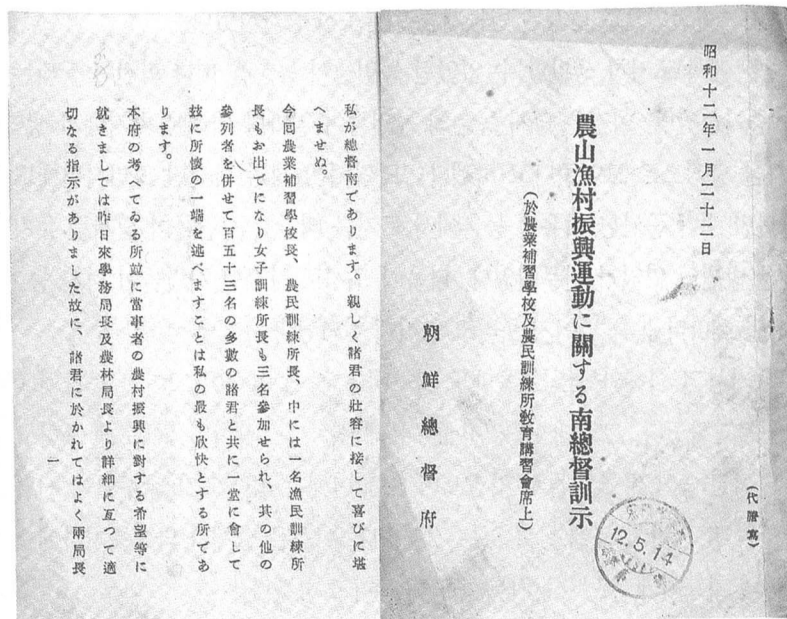
7) 朝鮮總督府, 앞의 책, p.719.

8)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제17집(1938), pp.3~4.

9) 정연태, 「1930년대 자작농지 설정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6(1991) 참조.

금으로 농민들이 자작 농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일제의 <조선소작조정령>은 지주와 소작인 간에 빈번한 소작쟁의가 발생하자 사법기관을 통하여 조정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저항을 막고자 하였다. <조선농지령>은 지주와 소작인간의 협조와 융화를 내세웠다. 즉 일제는 <조선농지령>을 통하여 마름의 중간 수탈을 금지시키고 재해 때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감면해 주며 소작기간의 규정을 통하여 농민들의 소작권을 보호해 주도록 하였다.⁸⁾



1937년 미나미(南) 총독의 농산어촌진흥운동에 관한 훈시

그러나 농촌진흥운동 정책의 본질은 한국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술책이었으며 당시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던 농민들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었다.⁹⁾ 또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은 관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군국주의 파시스트체제에 알맞은 새로운 조선지배정책을 재편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일제는 농촌진흥운동과 병행하여 북한지역에 군수공업 시설을 갖추는 것을 강행하였다.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일제는 70억 원을 군수공업에 투자하였다. 이어서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적 예속화를 한층 강화하고 한민족에 대한 착취와 자원의 약탈에 광분하였다. 즉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을 강화하면서 한민족의 인적 자원과 모든 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여 수탈하였던 것이다.

3. 항일독립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일제가 식민지 지배정책의 전환을 가져오자 이에 대한 조선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은 전개방식과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군사적 파시즘의 통치정책을 전개하면서 조선민족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전반기에 고조되었던 항일독립운동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퇴조하였다.

즉 대부분의 국내 항일독립운동 조직은 일제의 강경한 탄압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궤멸되거나 지하로 잠적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은 고립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지만 단 한번도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 전개되었다.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은 강렬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1930년 1월 25일 김구(金九)·이동녕(李東寧)·조소앙(趙素昂)·이시영(李始榮)·안창호(安昌浩) 등 26명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결성하였다. 한국독립당은 독립투쟁전선통일과 지방파벌투쟁을 목표로 하고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1932년 상해의 홍구공원(虹口公園)과 일본 도쿄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한 윤봉길(尹奉吉)과 이봉창(李奉昌)은 김구가 조직한 한민애국단의 단원들이었다.

그러나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이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자 중국의 항일독립운동 세력들은 1930년대 중반까지 외교활동과 개인적 테러에 치중하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이후 국내진공작전을 감행하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1930~1940년대 항일독립운동은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과 그 양상이 달랐다. 이 시기는 일제의 파쇼적 침략전쟁의 와중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파쇼적 강압수단에 의하여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민중들에 수탈은 가혹할 정도로 극심하였다. 따라서 1930~1940년대 항일독립운동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일제의 파쇼적 통치에 의한 탄압정책으로 국내의 항일독립운동은 지하화됐으며 국외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만주·노령 등의 국외에서 더욱 더 치열하게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는 조선민중들에 의한 일상적인 생존권투쟁이 항일투쟁으로 확대·발전되어 갔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세 공과와 각종 전쟁 부담금이 증가되고 통제경제가 실시되자 조선 민중들의 생활난은 매우 심각해졌다. 여기에 미곡수탈과 세계대공황 등으로 인하여 조선 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면서 농촌의 과잉인구는 도시로 배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도시에서 막별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대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토막에서 살면서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였다.¹⁰⁾

1932년 조선인 남자 실업자 수는 133만 명이었는데 1944년에는 590만 명으로 무려 4~5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 1930년대 초 공장노동자 수는 10만 명 정도이었는데 1940년대에는 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자노동자 수도 1930년대 이후로 증가하여 1931년 약 3만 명이었는데 1940년에는 7만 3천 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방적공업과 식료품공업부문에 종사하였으며 일본인 노동자와 민족적 차별을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활하였다.



1940년대 일본지역 징용 한국인들의 참상

일제는 조선 내에서 군수생산과 군사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조선인을 침략전쟁에서 총알받이로 쓰기 위하여 조선의 노동자들을 동원하는데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침략전쟁을 확대시키면

서 요구되는 많은 노동력의 원천을 농촌과 도시 빈민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흘러드는 자유로운 노동력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며 강권에 의한 노동력의 강제동원 방법을 이용하였다. 강제동원으로 대표되는 것이 노동력의 강제징발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제정되었던 <국민징용령>이었다.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한국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일제의 징용이나 강제동원에 의하여 군수공장과 군사시설에 가야만 했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그곳에서 군사적 노동력 관리에 의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하였으며 공장 경찰과 헌병들에게 폭행 및 심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¹¹⁾

이와 같이 조선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전시경제 체제하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일제의 파시즘 통제정책으로 인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경제투쟁은 곧바로 통치권력과 침략전쟁에 대한 저항의식 및 반일·반전투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조선 민중들은 중일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반전 전단을 살포하고 벽보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¹²⁾ 그리고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둘째, 조선 내에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색채를 지닌 단체들이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일제의 강경한 탄압 속에서 합법적 내지는 표면적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지만 항상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사회로의 지향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중일전쟁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일제의 패전을 바라는 언행을 하거나 침묵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가운데 국방장병헌금운동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 반대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애국의 성의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다.¹³⁾

이 시기 국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민족주의 세력은 동우회였다. 동우회는 1936년 말 600여 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있던 홍사단의 국내 별동대 조직이었다. 1937년 6월 동우회는 경성의 기독교 청년면려회(靑年勉勵會)에서 ‘금주운동’을 계획하고 각 지부에 지시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그 지시문 중에 ‘멸망에 빠진 민족을 구출할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문구가 일제에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에 착수한 일제는 이 사건과 홍사단이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전면적인 검거를 시작하였다. 이때 동우회 경서지회 55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으며 1938년까지 동우회 전국의 각 지회 관계자 181명이

11) 최윤규, 『근현대조선경제사』 (갈무리, 1988), p.395.

12) 朝鮮總督府, 김봉우 역, 『日帝植民統治秘史』 (청아출판사, 1988), p.99.

13) 朝鮮總督府, 김봉우 역, 앞의 책, p.101.

치안유지법으로 위반으로 구속·송치되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대개가 변호사·의사·교육자·목사·자본가 등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¹⁴⁾

셋째, 국외의 항일독립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특히 임시정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항일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 지역은 일제의 직접적인 세력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웠으며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항일 독립운동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하에 있었다.

임시정부세력들은 일제가 중국침략을 본격화하자 상해가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집단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중반까지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국제여론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던 방침에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중국 국민당정부의 항일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직접적인 항일 무장투쟁으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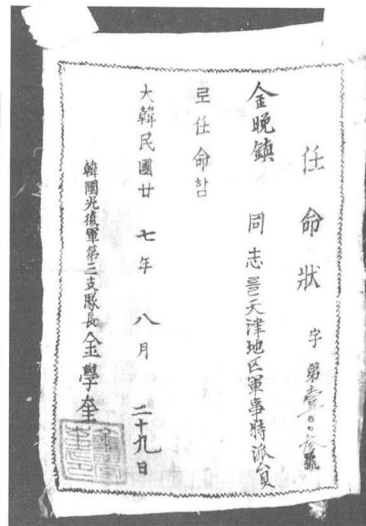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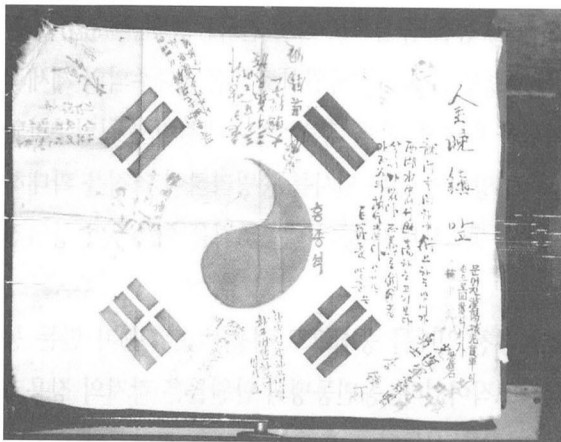
1937년 8월 김구 등은 정치이념이나 독립운동 노선이 상당히 공통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과 함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를 결성하고 임시정부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던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은 1937년 11월 중국공산당에 참여하지 않은 공산주계열의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朝鮮民族解放運動者同盟)과 무정부주의 계열의 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 등을 규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결성하였다.

이후 양 조직은 경쟁적·대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1939년 다시 통일전선운동을 추진하였다. 양대 조직의 대표자격인 김구(金九)와 김원봉(金元鳳)은 그해 5월 ‘동지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을 발표하여 중일전쟁을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호기로 보고 전민족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대 조직을 통합하여 1939년 9월 전국연합진선협회(全國聯合陣線協會)를 결성함으로써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또한 1938년 10월 김원봉을 총대장으로 하는 조선의용대가 무한(武漢)에서 창설되었다.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는 무장부대로 최초 2개 지대 100여 명으로 시작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에는 본부와 3개 지대를 거느린 300여 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의 화남전선 각지에 분산 배속되어 일제와의 전투보다 통역과 문서번역 및 선전활동에 동원되었다. 이에 조선의용대원들은 중국 국민당의 선전대 역할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일제와 맞서 싸우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상해를 떠난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한 후 이청천(李靑天)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을 조직함으로써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1941에는 조선민족전선 연맹 계열도 합류하였다.

1940년대에 접어들어 침략전쟁이 장기화의 국면에 들어가자 조선 민중들은 일제의



광복군 제3지대원들이 태극기에 서명하여 김만진에게 준 사진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로부터 천진 지구 군사 특파원으로 임명했던 임명장

아래, 광복군 제3지대 대원들(평택 출신 김만진 맨끝줄 오른쪽에서 5번째)



15) 이만규, 『여운형투쟁사』(총문각, 1946), p.170.

16) 이만규, 앞의 책, pp.175~176.

1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1), p.110.

패전을 민족해방의 결정적인 시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 초보적인 형태의 무장대가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였다. 1944년 여름 경상북도 경산에서 청장년 20여 명이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하여 결심대(決心隊)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식량과 죽창·낫 등의 무기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지리산에 은거하던 300여 명의 청년들은 하준수의 지도아래 항일유격대인 보광당(普光黨)을 조직하였다. 이 보광당은 일제의 주재소를 습격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4년 여운형(呂運亨) 등을 중심으로 하여 건국동맹(建國同盟)이 결성되었다. 건국동맹은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제국주의의 세세력을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을 강령¹⁵⁾으로 내걸면서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엄격히 제외하고 민족적 양심이 있는 인사를 총망라하여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노동자·농민·학생·부녀자 등의 대중조직을 이용하여 항일전선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경기도 양주·양평·여주·고양·홍천 일대를 중심으로 김용기(金容基)가 만든 농민동맹(農民同盟)은 건국동맹의 외곽조직이었다. 농민동맹의 단원들은 각지의 징용과 징병자들을 도피시키는 일과 함께 민심을 선동하고 후방의 치안을 교란시키는 일에 치중하였다. 또 농민동맹은 무장투쟁을 담당할 노동군과 치안을 담당할 치안대 편성에도 착수하였다.¹⁶⁾ 당시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원의 수는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은 일제 전시체제하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활동 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무엇보다도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여운형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민족해방운동의 역량이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을 통하여 그만큼 성장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¹⁷⁾

1930년대 이후 조선 민중들의 항일독립투쟁 열기와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저항의식이 확대되어가자 일제는 이에 대하여 보다 더 집요하게 탄압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이 일제의 국체변혁(國體變革)을 기도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달성시키려는 것은 우리 제국의 영토를 일부 떼어내어 그 통치권을 실질

적으로 축소시켜 그것을 침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런즉 치안유지법의 이른바 국체(國體)의 변혁(變革)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¹⁸⁾

특히 중국·만주·간도지방을 중심으로 전개한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일본국 및 그 괴뢰 만주국의 군대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무력탄압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특수공작으로 집단부락을 만들어 내부에 스파이단을 잠입시켜 검거하고 집요한 귀순공작을 펴나갔다. 또한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도 모든 항일민족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협화회(協和會)’라는 것을 만들어 조선인을 지배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 조선인 애국자들의 희생은 막대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의 성격을 갖는 집회는 물론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등 청년·노동·농민운동에 관한 집회도 불온하다고 하여 활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1933년 일제에 의하여 금지 해산된 집회의 건수는 342건이었다.¹⁹⁾

특히 1930년대에는 형법범·특별법범 등으로 매년 14~15만 명에서 20만 명이 검거되었다. 이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검사·송치되었으며 2만 명 전후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특별법범은 치안유지법 위반·보안법·출판법 및 다양한 사상범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1930~1933년까지의 검거 상황을 보면 3,257건에 2만 737명이었다.²⁰⁾ 그리고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구속 송치된 사상범을 분류해 보면 민족주의자가 268건에 1,085명이었고 공산주의자가 129건에 1,776명이었으며 학생은 189건에 999명이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외침 관계에 관한 대책인 방첩대책으로서 조선방첩위원회를 만들고 ‘방첩대책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중국 국경이나 그 근접 지역과 요새(要塞)·요항지대(要港地帶)·주요 군사시설 소재지·군수공장 등을 방첩특수지대로 설정하여 방첩사상을 선전하고 호구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하여 간첩사건으로 소련과 관계된 것이 1934년 이후 10년간 120건에 142명의 한국인이 검거되었으며 중국과 관계된 것으로 1937년부터 1944년까지 36건에 5명이 검거되었다.²¹⁾

이와 같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조선 민중들은 민족해방을 예감하고 일제와의 해방전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립국가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먼저 국내에서는 건국동맹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 범위의 노동군을 편성한다는 계획 아래 1945년 봄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후 전국을 8개 지구로 나누어 책임자를 파견하였다.²²⁾ 그리고

18)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p.520.

19) 朝鮮總督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3), pp.164~167.

20) 경성일보사, 『조선연감』(1944), pp.62~63.

21) 近藤一, 『太平洋戰爭終末期の朝鮮統治』(友邦協會, 1961), pp.73~81.

22) 이만규, 앞의 책, p.176.

건국동맹은 국외의 무장부대와 연락하여 국경지역에 유격대를 조직하고 백두산을 넘어 국내로 진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1944년 이후 연락책임자를 수 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지역으로 파견하였다.

동시에 국외의 민족해방운동 진영도 역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5개 조항의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하고 대일항전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민은 1개 전투 단위가 되어 반침략 전선에 참가한다
2. 1910년 한일합방조약과 기타 일제의 불평등 조약을 무효화 한다.
3. 왜구의 최후 멸망까지 혈전한다.
4. 난징의 괴뢰정권은 승인하지 않는다.
5. 한국독립의 국제적 보장을 요구한다.



광복군에 참여한 평택 출신 金晩鎭 (둘째줄에서 왼쪽부터 4번째)

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3년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광복군 1개 지대를 미얀마·인도 전선에 파견하였다. 이 광복군 지대는 한지성과 문응국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영국군과 합작하여 대적선전·포로심문·적정판단 등의 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한국광복군이 영국군과 함께 참전하여 연합군의 일원이 되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1945년 3월 한국광복군 소속 대원 450명은 직접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연합군에 배속되어 통역 및 정보수집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미군과 합동군사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한국광복군에게 OSS 특수군사훈련을 시켜 미군과 함께 국내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와 중국 주둔 미국군의 OSS 본부와 사이에서 한·미군사합작 합의사항이 서명되었다. 이리하여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입작전이 미국 OSS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1945년 5월에 시안에서 50여 명의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입작전을 위한 암호통신훈련과 낙하산 투하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각 지구의 공작반은 함경도 반장 김용주, 평안도 반장 강정희, 황해도 반장 송면수, 경기도 반장 장준하, 강원도 반장 김준엽, 충청도 반장 정일명, 전라도 반장 박훈, 경상도 반장 허영일 등이었다. 그러나 국내진입을 위한 모든 군사훈련을 마치고 출발 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한국광복군에게 일제의 무조건 항복소식이 전해졌다.

이리하여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한국을 위한 선발대로서 한국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였다. 한국광복군 국내정진군은 1945년 8월 18일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였지만 일본군의 저지로 되돌아가야만 하였다. 이후에도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1945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개인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한편 화북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을 새로이 편성하고 1944년 1월 이후 주력부대를 연안으로 이동시켜 정식 군사교육과 훈련에 치중하였다. 1천~2천 명 정도의 병력으로 편성된 조선의용군은 1945년 8월 무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8월 11일 국내진공을 결정하여 출동을 서둘렀다. 조선의용대의 행진곡은 다음과 같다.

우렁찬 혁명의 함성 속에 의용군 깃발이 휘날린다.

나가자 피끓는 동무야, 뚫어라, 원수의 철조망

양자와 황하를 뛰어넘어 피문은 만주벌 결전에

원수를 동해로 내어몰자, 전진 전진 광명한 저 앞길로.

무정의 조선의용군은 일본군·만주군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1945년 11월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항복으로 인하여 한번의 전투도 치르지 못하고 연합국의 승전에 의한 조국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각 독립운동 조직들은 독자적으로 조국해방 후의 독립국가 건설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임시정부는 1941년에 발표한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에서 장차 건설될 독립국가의 체제와 정책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토지와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 국비에 의한 교육, 사회보장제의 실시 등이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4년 제5차 개헌으로 마련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노동자 파업의 자유까지 인정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일제가 패망 후 수립되는 정권은 반드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국동맹의 경우는 강령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농중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과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박멸할 것’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독립국가의 정권형태는 국내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활동하였던 건국동맹이 주도권을 잡고 해외에서 활동한 세력을 영입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북조선독립동맹은 전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건립, 언론·출판·집회·신앙·사상·태업의 자유 확보, 남녀평등, 일본 제국주의자의 모든 자산과 토지의 몰수 및 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기업의 국영화와 토지분배, 8시간 노동제, 의무교육제의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 직전 국내외에 존재하였던 각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은 막연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해방 후 독립국가의 정치체제와 정책 그리고 정권의 형태까지 구상하면서 활동하였다.

4. 평택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의 항일독립운동

일제는 1907년 ‘보안법’을 제정하고 1910년에는 ‘집회취체에 관한 건’을 제정한 이후 한민족의 정치적·사회적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그런데 1933년 일제의 고등경찰 조사에 의하면 민족주의적·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단체가 6,939개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²³⁾

이들 단체들은 주로 정치시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의 사회사상·교육문예예술·종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이나 모임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여 일제에 저항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점차 강화하여 해산을 명령하였으며 강제로 전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1933년 평택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의 각종 단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단체 : 19개

노동·농민단체 : 80개

청년단체 : 165개

여성단체 : 65개

종교단체 : 155개

기타단체 : 170개

총계 : 654개

이는 당시 전국 6,396개 단체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²⁴⁾ 그리고 1938년 말 현재 평택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의 사회활동가 중에서 일제의 전향을 강요받은 사람은 모두 943명이었는데 이중 337명은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전국 7,790명의 전향 대상자의 12%이었고 전향 거부자 1,941명의 1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평택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의 시국관계 집회는 1938년 말 현재 6,113건이었고 참여인원은 1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²⁵⁾ 이러한 통계로 볼 때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집요한 탄압 속에서도 경기도 지방은 평택지역을 비롯하여 끈질기게 항일 독립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1935년 조선헌병대 사령부가 파악한 경기도 지방의 치안상황을 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사건이 6건이었고 공산주의계열의 사건은 13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이 수치에 있어서 1위를 기록하였다.²⁶⁾ 그리고 독립사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경기도민의 5%는 항상 독립을 염원하고 있으며 29%는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조선이 반듯이 독립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일제가 선전용으로 조사하여 그 정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약 35%에

23) 朝鮮總督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3), p.161.

24) 朝鮮總督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p.167.

25) 朝鮮總督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pp.118~122

26) 朝鮮憲兵司令部, 『1935年朝鮮治安關係一覽表』,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1(1936), pp.338~339

27) 朝鮮憲兵司令部, 앞의 책, pp.361~363.

2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8집 (1990), p.247.

29)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1990), pp.175~176.

30) 이기하, 『한국공산주의운동사』(1976), pp.1169~1170

해당하는 도민이 조선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항일의지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일제의 헌병대나 경찰이 주의 깊게 경계하여야 할 ‘요시찰인물’의 수도 경기도 지방이 1위로서 전국의 20%를 차지하였다²⁷⁾는 데에서도 증명이 된다고 하겠다.

1935년도 경기도 지방의 민족주의계열의 단체 수는 모두 7개로서 2,907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국 22개의 단체 중 30%에 해당하는 수치이었고 전국의 총단원 4,285 명의 68%에 달하는 수치이었다.

조문기(趙文紀)는 일본강관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동회사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차별하자 민족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²⁸⁾ 조문기는 이후 본격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44년 동료 유만수(柳萬秀)와 함께 일본에서 몰래 국내로 들어왔다. 국내로 들어온 조문기와 유만수는 1944년 5월 강윤국(姜潤國)·우동학(禹東學)·권준(權俊) 등과 함께 대한애국청년당(大韓愛國靑年黨)을 결성하였다. 대한애국청년당은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인 고위관리와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거두들을 처단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²⁹⁾

그리하여 대한애국청년당은 1944년 7월 24일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朴春琴)이 항일과 반전사상(反戰思想)의 격파를 목적으로 결성한 대의당(大義黨) 주최로 부민관에서 개최된 아세아민족분격대회(亞細亞民族憤激大會)에 침입하여 대회장을 폭파시켰다. 대한애국청년당의 부민관 폭탄의거는 당초의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의 집회개최 소식을 듣고 조문기 등 3명의 청년들이 의거하였다. 이후에도 조문기는 조동필(趙東必)·유태현(柳台鉉) 등과 함께 화성군 매송면 노림리의 야학당을 거점으로 하여 중대한 거사를 계획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비밀결사운동은 민족주의계열의 경우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1935년도 평택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의 사회주의계열의 운동단체 수는 6개이었고 소속단원은 2,319명이었다. 이는 9개 단체 1,336명이 활동한 경상북도 지방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가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평택지역과 인접한 안성군 죽산면에서는 죽산농우학원 강사로 있던 이봉재(李鳳宰)·심혁상(沈赫相)·윤일남(尹一南)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경기도공작위원회준비회(京畿道工作委員會準備會)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사립학교 교원을 결속시키고 활동지역을 용인 등지로 확대시켜 활동하던 중 1932년도에 검거되었다.³⁰⁾ 1938년 7월에는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에 사는 김영배(金永培)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일전쟁은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어 장기화되면서 일제의 경제력은 파탄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일제는 패전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조선민족의 장래를 설파하였다.³¹⁾ 또 박재봉(朴在鳳)은 1940년 일제의 징용 및 근로보국대를 비판하다가 투옥되었다.

평택지역도 자료가 현존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인근지역인 안성에서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이 산견(散見)되는 것으로 보아 평택지역도 이러한 사회주의계열의 운동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 평택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의 특징은 어떠한 조직적인 집단의 설립이나 계획적인 항일운동의 양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개인의 항일독립정신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인 반전·반일의 투쟁의지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제는 1930~1940년대는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한민족을 전시체제에 동원시키고 국방헌금과 위문금의 헌납을 강요하였다. 이에 진위군에서는 1937년 7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00여 명의 유지가 모여 더위를 무릅쓰고 4~5시간 동안 비상시국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진위국방후원회(振威國防後援會)를 조직하였다.³²⁾ 이후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국방헌금과 위문금을 헌납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파쇼적 통치하에서 국방헌금과 위문금의 헌납은 당시대를 살아가는 한국민으로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국방헌금과 위문금의 헌납은 그 시기 한민족이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1930~1940년대 항일독립운동은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계획하면서 전투력을 갖추어 나가던 시기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여 민족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항일독립운동 세력들이 독립을 준비해 가던 과정 속에는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정책과 방안들이 있었고 이것이 조국해방 후 자주적 민족독립국가 건설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1930년대부터 해방 때까지 평택지역 항일운동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표면화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평택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없지만 국내에서 안재홍의 중국항공학교입학사건과 흑백당의 이경춘, 광복군에 참여하였던 원심창·정우진·김영오·신순호·김하진·김만진 등 평택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재홍은 1936년 3월 중국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31) 朝鮮參謀部, 「1939年後半期 朝鮮思想運動概況」, 『日帝下社會主義運動史資料叢書』 3, pp.555 ~556.

32) 『동아일보』 1937년 8월 1일자.

33) 『동아일보』 1937년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3일자 및 『매일신보』 1937년 10월 9일자.

34)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8권, 국가보훈처, p.190.

35)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5권, 국가보훈처, p.78.

36)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5권, 국가보훈처, p.875.

37)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5권, 국가보훈처, p.914.

38)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5권, 국가보훈처, p.914.

39)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5권, 국가보훈처, p.1066.

정필성과 김덕원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두봉과 박찬익에게 소개장을 써주었다. 이 항공학교 입학사건은 이해 5월 종로경찰서에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안재홍이 징역 2년, 김덕원과 정필성이 징역 1년을 각각 언도받았다.³³⁾

원심창은 팽성면 안정리 출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일본대학에 유학하였다. 이 시기 무정부주의자들이 결성한 흑우회(黑友會)와 흑룡회(黑龍會), 흑우연맹(黑友聯盟)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31년 출옥 후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 도착한 원심창은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 재건,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 조직에 적극 참여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천진 일본영사관과 일본기선부두 및 병영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3년 3월 17일 주중국 일본공사 유길명을 테러하려다가 체포되어 15년형을 받고 녹아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³⁴⁾

김상완은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7년 정의부(正義府), 1929년 국민부(國民府), 1931년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1934년 조선혁명정부(朝鮮革命政府) 등에 가입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일제에 피체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고 1934년 5월 출옥하였다. 이후 조선혁명군 대원으로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며,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심양에서 활동하다가 1941년 귀국하였다.³⁵⁾ 김만진은 1934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북경에 정착, 일심양복점을 경영하면서 한국 청년들의 광복군 입대 알선 및 자금조달책으로 활동하였다.³⁶⁾ 그리고 김하진은 김만진의 동생으로 1944년 1944년 중국 하남성 개봉지구에서 광복군 지하공작에 참여하였으며, 1945년 광복군을 창설하자 제3지대에 입대 대적선공작 및 초모공작, OSS 특수훈련 참가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³⁷⁾ 신순우는 청북면 고잔리 출생으로 1934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42년 중국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45년 광복군이 창설되자 제3분처에 입대하여 지하공작 책임자로 활동하였고 중국 적강교하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³⁸⁾ 끝으로 정우진은 1945년 광복군이 창설되자 제3지대에 입대 광복군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³⁹⁾

5. 평택 출신 이경춘의 흑백당 활동

일제는 1936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의 모든 사상과 단체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운동은 비밀결사체를 조직

하여 지하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평택 출신 이경춘은 보성전문학교 재학 중 흑백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39년 경복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현상(李賢相)·장의찬(張宜燦)·홍건표(洪建杓)·성익환(成益煥)·주낙원(朱樂元) 등은 안재홍·한용운·여운형 등 민족지도자들로부터 감화를 받고 조국광복에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먼저 동지를 규합하자 당시 경성사범학교 재학 중인 이경춘이 참여키로 하였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자 회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이해 9월경 서울 봉래동 주낙원의 집에서 흑백당을 창립하였다. 창립 당시 선언문, 강령 및 중앙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선언문(요지)

삼천리 금수강산에 단군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조국이 악독한 일제의 잔인무도한 질곡 속에서 빈사지경에 이른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여기 조국과 민족을 구하고자 흑백당을 조직한다. 우리는 조국이 광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제와 투쟁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엄숙하게 선언한다.

강령

1. 본 당원은 조국광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
2. 본 당원은 본당의 조직, 이념, 행동에 관한 사항은 절대비밀로 한다.
3. 본 당원은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전력을 다하여 완수토록 한다.

중앙집행위원

이현상(李賢相), 장의찬(張宜燦), 홍건표(洪建杓), 주낙원(朱樂元), 성익환(成益煥), 최고(崔果), 명희택(明義宅), 남상갑(南相甲), 김성근(金盛槿), 이경춘(李慶春)

흑백당이 조직되자 회원 중 순국정신이 강렬한 회원을 선별하여 특공대를 조직하고 항일무력행동으로 악질 일본인이 거주하는 옥정(旭町, 현 서울 중구 남산동) 일대를 방화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연합국측에서 반드시 일본 본토와 서울을 폭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항일봉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학병징집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부득이 학병으로 강제징집을 당할 경우 중경으로 탈출하여 광복군에 참여하도록

40) 주낙원, 「일제말 흑백당사건의 전말」, 『신동아』, 1978, 2, pp 335-367

록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1943년 초 김창흠(金昌欽)이 괴산경찰서에 체포됨에 따라 홍건표 등이 검거되고 흑백당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흑백당 중앙집행위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중국으로 망명임시정부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명희택과 최고, 성익환과 이경춘, 이현상과 주낙원, 장의찬과 김성근이 각각 한조가 되어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이경춘조는 북경 경성일보 지국 앞에서, 명희택조는 봉천에서, 장의찬조는 국내에서 각각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이경춘은 1944년 12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옥중에서 해방을 맞았다.⁴⁰⁾